과학벨트법 민주당내 충청-호남 싸움

충청 의원 "개정안 상정은 당론 위배… 지도부서 조치를"

호남 의원들 "당론 내용·절차 문제… 전략적 접근 필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를 놓고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충청권 국회의원들 간의 감정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 5일 광주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내용의 과학벨트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당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6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에 따르면 충청권 의원들은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당론 위배 행동에 대해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도부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벨트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는데도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광주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상정을 밀어 붙이는 등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청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 등에 대해 출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원은 6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출당 등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도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물론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올 예정인 한전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충청권 의원들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과학벨트와 관련된 민주당 당론은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어 유효하지 않다"며 "현재 각 지자체가 과학벨트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만 수수방관하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과학벨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점에서 충청권과 호남권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충청권 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은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정 충돌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5일, 3건의 과학벨트법 개정안의 국회 교과위 상정 이후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했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절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미소 대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양보는 민주당 위한 길"

손학규, 광주서 이틀째 민심 달래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에 머물며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 문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흐트러진 호남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광주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의 지역 시민단체 원로들과 간담회를 하고 "선거 연대를 못하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양보안 하면 민주당은 죽는다"며 "호남 양보는 민주당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어 "나를 버리는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이라는 말을 살찌우겠다"며 "내가 그 말의 기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수가 못돼도 민주당을 위한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대권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수권정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양보'를 통한 야권연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순천 무공천 문제에 대해 "아직 당이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무공천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야권연대는 단순한 연대가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연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과학벨트로 충청도와 전라도를 싸우게 하려고 한다"며 "강운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정권교체를 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정책을 펼 수 있으니 광주·전남에서 양보를 해달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학벨트가 광주로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가져온다고 해도 부스러기 일뿐일 것"이라며 "(그 대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광주·전남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저녁에도 광주지역 의원들과 만나 "야권연대는 시대정신"이라며 "순천 무공천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손 대표가 '호남 양보론'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호남으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 과단성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면죄부法"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에 네티즌 비판 확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4일 현 정치자금법의 3개 조항을 바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행안위는 이밖에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여야 홈페이지 등에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법안은 일심동체"라거나 "서명운동이라도 벌이자"는 등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관문을 넘기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른바 '청목회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 강기정 의원은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인 부분과 후원회 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법 개정 취지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베일 가린' 야권연대 협상 성과 낼까

민주당 등 야4당이 4·27 재보선 연대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 정파의 협상대표들은 지난달 23일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4곳이 참여하는 '4+4' 형식으로 매주 2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왔다.

순천 제외 3곳 경쟁 공감대 속

김해 단일화 방식 놓고 신경전

협상 내용이 실시간으로 외부로 생중계되다시피 하면서 오히려 난관에 부딪혔던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협상단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협상단은 이달 10~15일을 잠정적 협상 시한으로 잡고 재보선 전체 지역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대상 지역인 '3+1'(분당·순천·김해 국회의원+강원지사) 가운데 민주당이 '무(無)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순천을 제외한 3곳에서는 '경쟁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원칙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 각론을 놓고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협상단은 5일에도 협상을 가졌으나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 협상 대표인 이인영 최고위원이 6일 기자간담회를 잡았다 연기한 것도 협상이 뚜렷이 진척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을에서 맞붙게 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교적 높은 정당 지지도를 등에 업기 위해 여론조사 과정 등에서 당명 표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참여당은 "제1야당의 지나친 프리미엄"이라며 이에 부정적이라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H 재정난 이유 중단 21곳 주거환경개선 정상화를"

여야의원 결의안 제출

여야 의원 21명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한 전국 21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도시서비스 수준이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해 각종 재해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런데도 LH는 수익성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 서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금자리사업 등 다른 주택사업보다 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며 "LH는 21개 구역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이 의원 외에 한나라당 조진형 박민식 정희수 허태열 박상은, 민주당 조영택 오제세 이종걸 안규백 이춘석 강봉균 최규성, 자유선진당 임영호 이명수 김창수 변웅전 김낙성 권선택 이진삼 이회창 의원 등이 동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